

지방자치단체 결산제도 개선방향

- 재무회계 결산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중심으로 -

2014. 4. 25



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



목 차

I. 복식부기 결산제도 도입경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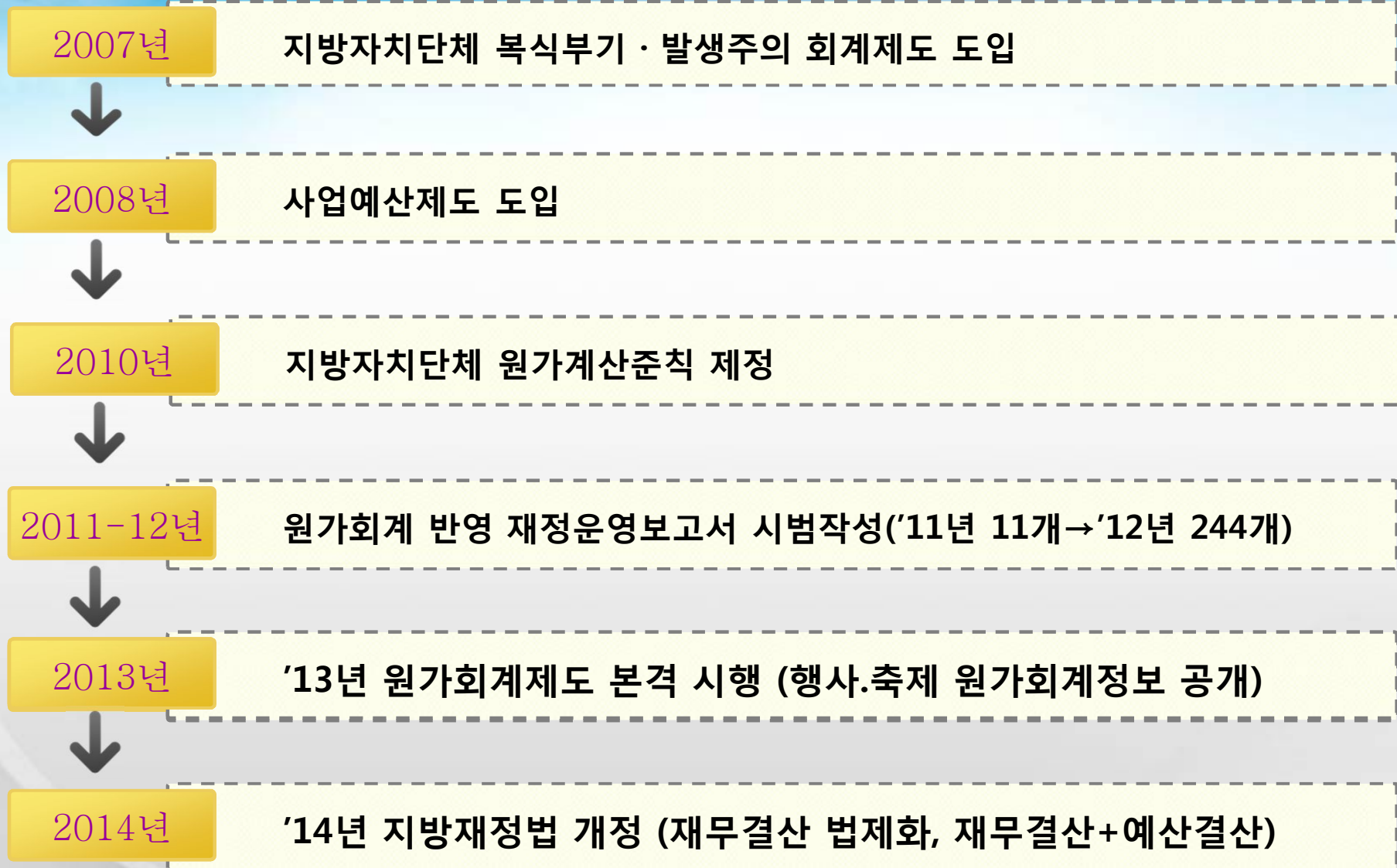
II. 그간의 추진성과

III. 재무회계 결산제도 관련 문제점

IV. 지방자치단체 재무결산 제도 개선방향

IV. 향후 추진 일정

I. 복식부기 결산제도 도입경위



II. 그간의 추진성과

■ 복식부기 재무회계 도입 관련 법령 정비('07~)

- 지방분권특별법('04.10월), 지방재정법 개정('05.8월)
- 지방회계기준 및 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 등 제정

■ 지방자치단체 원가회계제도 시행

- 원가계산준칙 제정, 원가회계시스템 개발('10.12~)
- 시범운영('11~'12년), '13년부터 원가회계제도 전면시행
- 자치단체별 행사·축제 원가정보 공개('13.9월), 안행부 통합공시('13.10월)

■ 복식부기에 의한 공공부문 부채산출

- ('07회계연도) 복식부기 도입에 따라 (자산 및) 부채 규모 산출
- ('12회계연도) IMF 국제지침에 따라 지방공기업 포함(전 공단 및 일부 공사)
- ('13회계연도) 세계은행 국제기준(PSDS)에 따라 전체 공사공단을 포함

■ 지방회계발전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 추진

('14년 3월, 법안소위 통과)

-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서 통합,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신설
- 지방자치단체 재정정보공시 및 안행부 통합공시 근거 마련

〈 [참고] 지방재정법 개정안 주요내용 〉

구 분	현 행	개 정	비고
출납폐쇄 기한 조정	익년도 2월말	당해 연도 12월말	제8조
통합결산서 작성체계	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별도 규정, 재무결산 첨부	재무제표와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의 종류에 추가	제51조
지방회계·연 구 외부 위탁	-	지방회계, 결산 등의 외부 전문기관 위탁 근거마련	제53조
회계제도심의 위원회 신설	-	법령 제 개정사항 심의를 위한 법적 심의기구 설치	제53조 의3
지역통합재정 통계 산출	자치단체는 통합재정정보 안행부 제출(일반+특별+기금 포함)	통합재정정보에 공기업 및 지방교육재정 포함 (공기업 +출자출연+지방교육재정)	제59조
통합공시 근 거마련	국정감사 요구로 안행부 재정고에 통합공시(10월)	지자체 공시내용 비교평가 비교공시, 수정공시 요청	제60조 의2

Ⅲ. 재무회계 결산제도 관련 문제점

■ (사업연계) 예산편성 및 성과관리의 체계적 연계 부족

- 결산과정을 주로 예산집행 결과의 적법성 확인수단으로 인식
-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결산정보와 예산편성·사업성과 관리체계와 연계 미흡

■ (검사체계)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 체계 미흡

- (검사절차) 결산의 객관적 오류 검증을 위한 결산검사 절차, 매뉴얼 미비
 - * 12년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활용하고 있으나, 자치단체의 의견 등 수렴후 확정 필요
- (의회의 무관심) 결산을 통과의례로 인식, 예산결산에 대한 의회의 관심 부족

■ (결산정보) 재무결산 정보의 신뢰성 및 활용도 미흡

-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 사업결정에 집중되어 사업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재정정보의 제공이 미흡
- 주민, 관리자, 담당공무원 등 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정보제공 체계 미비
- 재무정보의 유용성 면에서 자산평가, 기능/사업단위 원가정보 제공 미흡

■ (교육 홍보) 다양한 교육실시 및 효과적 홍보추진 체계 미비

- 결산담당자 위주 교육실시로 사업담당자, 관리자, 의회의원 등의 이해미흡
- 복식부기 제도와 공시되는 재정정보에 대한 자치단체 주민의 이해 부족

■ (인사 조직) 순환인사 및 관리조직 미비

- (순환인사) 잦은 전보 및 신입, 하위직 공무원 위주 임명으로 전문성 축적 곤란
- (전담조직) 복식부기 도입 초기에 자치단체별로 재무결산 팀이 해체되어, 예산 및 재무결산 업무를 1인이 수행하거나, 타 업무와 병행하고 있음
- (전문교육) 주로 실무자 대상 교육실시, 관리자, 의회의원 등 대상 교육과정 미비

IV. 지방자치단체 재무결산 제도 개선방향

- (결산검사 강화) 외부 전문가로 감사위원 임명, 객관적 결산검사 절차, 기준 마련
- (활용도 제고) 정부3.0 시대에 맞게 '알기쉬운 재무제표 체계'를 개발·제공
 - 예산편성, 사업관리 연계로 주민, 관리자, 담당자 등 다양한 정보수요에 부응

① 결산검사의 객관성 공정성 강화를 통한 결산검사 강화

- 외부전문가 위주의 결산검사 위원임명 추진 (예시 : 임기제)
- 지방결산검사준칙 제정(검사절차와 기법, 보고 등 기준 제시)
 - * 결산검사제도와 재무제표 검토제도 통합 등 제도개선 추진
- 자치단체별 감사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의한 회계결산 감사제도 도입 검토

② 예산편성, 사업성과관리에 대한 결산정보 환류, 연계체계 강화

- 정책목표의 달성도, 적시성,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체계 개발
- 사업수행 단계별 정책결정 및 계층별 맞춤형 정책결정 정보 제공
- 사업별 결산결과 정보를 예산편성에 환류, 부서별, 담당자별 성과평가에 반영

③ 재무결산 정보의 이해 및 접근의 편리성 제고

- ‘알기 쉬운 재무제표 만들기’, 전문가 위주의 용어를 알기쉬운 용어로 대체
- 타 자치단체 및 시계열 추세분석 자료를 지방재정 공시자료로 제공
- 행사 축제 등 주민의 관심사업에 대한 결산정보와 지표를 개발 제공

④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원가회계정보 공개 확대 추진

- 사업별 원가정보의 분석 및 공개기능 강화 (예시, 도로, 청사, 교량, 터널 등)
- '13회계연도에 실시한 자치단체별 행사·축제 원가회계정보 세부내용 공개
 - * 총원가 광역 1억, 기초 5천만원 이상 행사·축제(1,744건 5,836억원), 운영비, 사업수익 등 공개
- '14년도 행사·축제 대상을 확대,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수집·분석, 배포
 - * 광역 5천만원, 기초 1천만원 이상의 행사·축제를 대상(367건, 총 3,969억원)

⑤ 효율적 재정통계 산출 및 재정분석 강화로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

- 결산서를 재무결산 정보 중심으로 통합하여, 결산업무의 효율성 제고
 - ▷ (예산결산)세입세출, 기금, 채권, 채무, 공유재산, 물품, + (재무결산) 재정(상태+운영+자산)
- 지방재정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통합 재정통계 산출 추진
 - ▷ (현재) 국가 전체 공공부문(중앙+지방+공기업) 부채 산출 및 공개
 - ▷ (향후) 자치단체 + 지방공기업 + 출자·출연기관 + 지방교육재정 등 통합 산출, 공개
- 회계부서의 자치단체 재정분석 진단 기능 강화- 재무결산 통계를 활용하여 지방재정상태에 대한 다양한 분석지표와 기법 제공, 자체 재정분석 진단강화

⑥ 복식부기 교육 저변 확대를 통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 제고

- (단기) 결산검사위원, 지방의회의원, 관리자 등에 대한 회계 결산 교육 실시
- (장기) 시도별 재무회계 교육과정 개발·보급, 시도별 전문교육 요원 양성(가점 부여), 시도별 자체교육 역량을 강화



지방회계 관련 개별법 제정 추진 ('15년~)

-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련규정 분리, 독자적 지방회계제도 기준연구 기틀 마련
- 신뢰성 있는 결산정보 확보, 객관적 결산검사 실시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

* 자치단체, 민간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후 제정안 마련하여 추진

* '14년 연말까지 지방회계법 제정안 국회제출

V. 향후 추진 일정

■ 결산검사 강화 및 재무회계 결산의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('14. 4~9월)

- 제도개선 T/F 운영('14.4~9월), 연구용역('14.5~9월), 제도개선 추진('14. 10월~)

■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산검사 절차 마련

- 결산검사 준칙 검토(~'14. 5월), 의견수렴(6월), 준칙 제정 시행('14.7~9월)

■ 행사·축제 원가정보 공개 확대

- ' 14년 행사·축제 원가정보 공개안 마련('14.6월), 자치단체('14.8), 통합공개('14.10월)

■ 지역통합재정 통계산출 추진

- '13회계연도 재정연감·통합재정수지 및 재무현황.'01GFS 작성('14.10)
- 공공부문 부채산출('14.12월), 교과부협의를('14. 6~12), 통합재정통계 산출('16년)

감사합니다

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장 최두선

